

‘수입 오징어 포장’서 코로나 검출에 정은경 “감염 위험 없어”

“바이러스, 식품 포장지 표면에서만 증식 어려워” “실외, 실내보다 안전하지만 접촉시 똑같은 위험”

방역당국이 21일 중국 지린성(吉林省)이 수입한 러시아산 냉동 오징어 포장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음식물 섭취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러스는 혼자 생존할 수 없고 동물이나 사람 등 숙주가 필요하다”며 “식품 포장지 표면에서만 증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린성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창춘(長春)의 한 식품회사 냉동 오징어 제품 포장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제품은 중러 접경인 지린성 훈춘(琿春)의 한 회사가 러시아에서 수입해 지린성 곳곳 냉동 수산 도매점을 통해 팔렸다.

지린성 보건당국은 이날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수입 냉동 오징어를 구매하거나 먹은 사람들은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산 수산물을 적지 않게 수입하면서 이를 통한 감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물론 코로나19 유행이 많은 나라에서 냉동 식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감염됐고, 그분들이 (냉동 식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겉표면에 비밀이 묻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바이러스가 장시간 생존하거나 증식하기는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전염력이 있는 상황으로 전달되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이것을 통

한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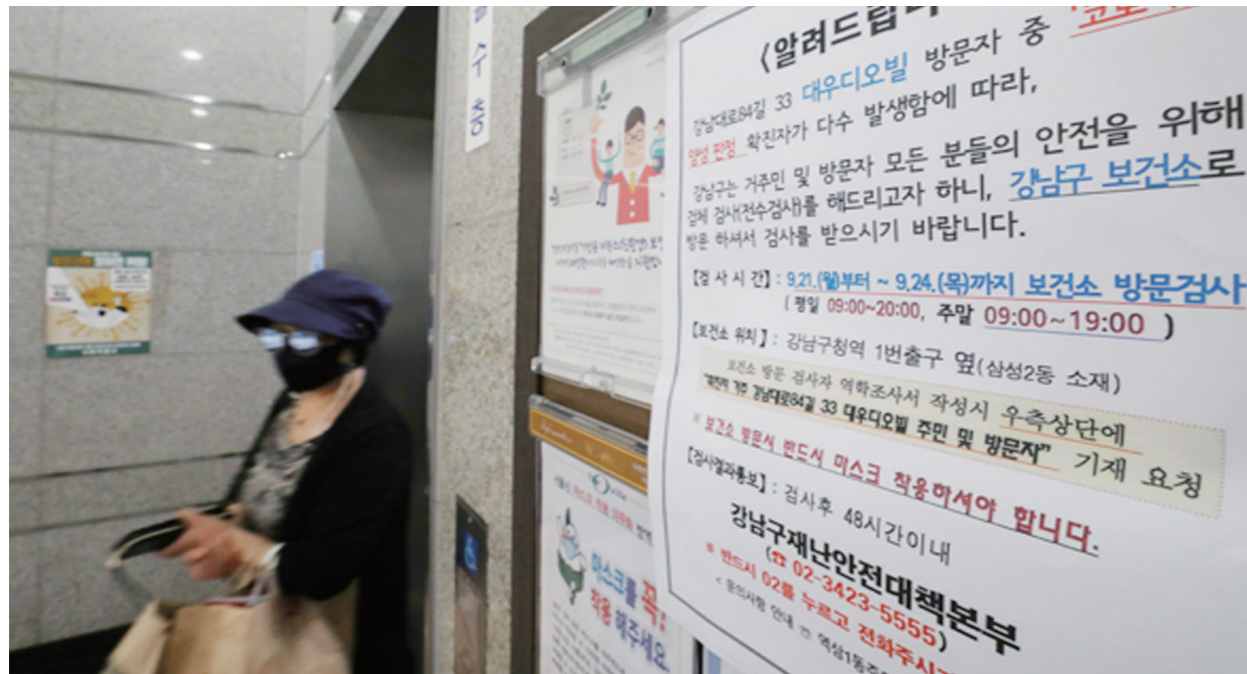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식품이나 포장지를 다뤘을 때 그 부분이 불안하다면 손 씻기를 열심히 함으로써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실외 공원 좌석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실외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실외의 공간은 실내보다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실내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환기와 소독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접한 공간에서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며 “실외보다 실내에서 감염노출 위험이 훨씬



“실외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운동하고 대화하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확진자 다수 발생한 강남 소재 오피스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여명 발생한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대우디오빌플러스에서 21일 오후 한 입주인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알아내...경찰 “인적사항 특정”

“폐쇄 후 재개 부분 연속범·공범 간주 수사 진행”

김창룡 경찰청장이 폐쇄 후 재운영 중인 ‘홍약법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수사를 종합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종전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물론 현재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21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디지털교도소 수사와 관련해 “전담 기관을 지정해 수사해왔고,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기 검거해 국내 송환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폐쇄 후 다시 열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범, 공범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게시 정보 17건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방심위 결정과 수사는 별개 사안”이라며 “운영 주체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두 사이트를 합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또는 홍약법과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운영된 사이트로,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이트는 한 차례 접속이 차단됐다가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차단 기간 사이트에는 자신을 ‘2대 운영자’로 소개하면서 운영 재개를 예고하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이 사이트와 관련해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무고한 신상공개 피해 사례들이 실재하고 있다.

숨진 고려대 학생이 생전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게시된 것을 역올해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진 상태다.

오유나기자

추석명절 앞두고 축산물 부정유통 감시 강화

축산물 영업장 240곳 점검

전남도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오는 25일까지 부정 축산물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남지역 축산물 영업장 4513곳 가운데 24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 처리업체

와 축산물 판매업체·운반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으로 전남도는 시·군, 명예위생감시원과 함께 단속을 한다. 점검은 주로 작업장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식육란 수집 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판매와 축산물 운반과정 중 냉장·냉동 기준 준수, 성수기 입

시 채용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성이 의심된 제품들은 수거 후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를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김정환기자

전 광주시 부시장 선거법 재판, ‘증거 위법성’ 공방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 6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

비, 다른 피고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127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부탁, 권리당원 105명·21명·11명을 각각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광주시 행정부시장 신분이었다.

검찰은 정씨가 제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간부 활동경력이 있는 인물과

자신의 모교 총동창회장 출신 인사, 체육계 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발견,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정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